

민주, 윤 총선 메시지에 “가슴이 갑갑해져”· “마이웨이 선언” 비판

이재명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상황…철저히 준비할 것”
홍익표 “반성은 없고 변명으로 일관…국민 입장에선 분통”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가슴이 갑갑해졌다”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고 갑갑해지기 시작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분 말씀이 ‘이제 마음의 준비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

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반성은 없고 변명만으로 일관했다. 국민 입장에서 분통 터지는 메시지”라며 “형식도 문제다. 대국민 담화문이 아닌 국무회의의 인사말로 대신했는데 이런 입장 내려고 옛새간 침묵했다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 기초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

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위원들도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형적인 남 탓, 책임 떠넘기기, 발뺌 선언”이라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런 인식이니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자신에 대한 사과와 반성, 비전과 협치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는 것”이라며 “무식하고 무성의한 네 가지가 빠진 사무 선언이었다. 이러니까 참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정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인식하지 못했다니 반성은커녕 또 국민 탓인가”라며 “나는 옳았지만 국민이 몰라줬단 생각이니 앞으로 변할 뜻이 조금도 없다는 불통 선언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년 파국을 맞고 싶은 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반성조차 없다. 이 정도면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고백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 의사부터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국정 기초를 바꾸고 야

당과 협치하라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든 매서운 회초리가 윤 대통령에게만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윤 대통령은 입틀막을 넘어 귀틀막 정치를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선욱기자

조국혁신당, 대통령실 야권인사 기용설에 “인사쇼핑 멈춰야”



조국혁신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총리 기용설 등 잇단 인사설에 “대통령실은 인사 쇼핑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대변인은 17일 오전 논평을 내어 “언론에 슬쩍 흘려볼 일이 아니다”라며 “안 되면 다른 사람 거론하고, 꼭 쇼핑하듯 한다. 무도하고 무례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를 고르

면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까”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4·10 총선이 끝난 뒤 언론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낙선자는 물론, 야당 정치인까지 소환된다. 오늘도 일부 언론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야당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은 기사가 나도 입에 달린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다. 대통령실이 뜻을 접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자리가 싫은 사람은 보도에 필적된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오보라고 발뺌한다”며 “전형적인 ‘발롱 데세(ballon d'essai·테스트 풍선)’ 수법이다. 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보를 슬쩍 흘려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일국의 총리, 대통령 보좌의 최고 책임자를 이런 식으로 고르고 있다”며 “이미 ‘입기 말 정권’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 그래도 좀 심하다. 민망하다. 한심하다”라고 전했다.

또 “자기 뜻과 관계없이 이름이 거론된 분들은 무슨 죄인가”라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직전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일 것이다. 정말 총리 후보로 모시고 싶다면 야당과 김 전 총리께 예의를 갖춰 여쭙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두고 보겠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인사 쇼핑’을 하는지, 그 결과 얼마나 훌륭한 분을 모시는지”라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이재명 당대표 연임론에 당내 일각 “또 방탄”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4개월여 남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는 이 대표 체제로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며 연임설에 군불을 뿜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당대표 연임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현실화하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대표 임기는 8월 28일까지로, 직전 주말에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당 안팎에선 공고해진 당내 장악력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당권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에서 배지를 다는 초선만 73명으로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지역구 당선인(161명) 중에 확실한 친명계는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거치며 당 체질이 압도적인 ‘친명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연임을 원한다고 하면 경쟁자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명계는 이미 연임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어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헌상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5선 고지에 오른 박지현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 대표가 연임하는 게 맞다”며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하고 그 리더십에 이번 총선의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거듭했다.

당내 일각에선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직을 연임하면 ‘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친명 색채가 열린 한 의원은 “지금은 당권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 현장을 챙겨야 한다”며 “벌써부터 친명계가 이 대표 연임 얘기를 하는 건 오만한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잘해서 라기보다 윤 정권이 못해서 총선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당대표 연임에 욕심을 내는 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연임하는 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 관계자는 “당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필요하지만 대권주자인 개인을 생각하면 득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총선을 통해 최상의 성적을 받았는데 다시 성적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대선주자가 당대표를 또 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수권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